

폭력에 시달리는 구급대원 갈수록 늘어

광주·전남 4년간 119요원 폭행사건 37건 발생 구속률 4.7%·대다수 벌금형...“처벌 강화해야”

광주·전남에서 폭행에 시달리는 구급대원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인 1조로 출동하는 구급차 안에서 주위자가 갑자기 일어나 때리면 그냥 맞거나 구급차 안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웨어러블 캠 영상 등을 확보해 폭행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대책의 전부인 실정이다.

더구나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의 구속률이 4.7%에 불과한데다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광주·전남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지역 내 구급대

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총 37건에 달했다.

광주는 2015년 5건, 2016년 4건, 2017년 5건, 올해 9월 기준 4건 등이다. 전남의 경우 2015년 12건, 2016년 3건, 2017년 3건, 올해는 지난달까지 1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663건에 이른다.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 2017년 167건, 2018년 6월 기준 99건 등이다.

그러나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극미 미미한 수준이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31건이 구속, 632건이 불구속으로 수사가 종결되거나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률은 4.67%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소방관들의 폭행문제가 근절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혹은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소방활동 방해죄로 기소돼 벌금형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처분 건수는 전체 564건 가운데 32%인 183명에 달한다. 10명 중

3~4명은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로 찢값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시민 윤 모씨(35)는 “구급대원들은 우리들의 생명과 직결된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인데 취객의 주먹에 맞았다는 소식을 들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현재 음주자에 대해서는 감경이 적용돼 가볍게 처벌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경없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 안전망도 취약하다. 구급차 내의 CCTV나 직접 착용한 웨어러블 캠 등의 영상을 확보해 폭행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매일 수차례 긴급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에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선 소방서 한 구급대원은 “폭행을 당한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시스템인데 고소·고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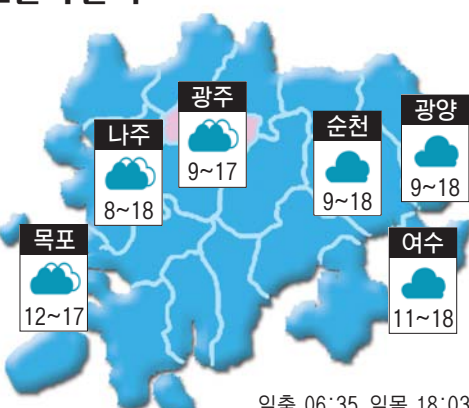
하더라도 피의자들의 잦은 통화와 민원·보복 등으로 업무가 마비되는 단점이 있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확실하고 강력한 처벌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현재 분위기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 현장에 출동했는데, 심한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면 한동안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트라우마가 생겨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구급대원들도 흔히 볼 수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소방청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소방관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수준을 높이겠다는 ‘무관용 대응책’을 내놔다.

/김종찬 기자

오늘의 날씨



일출 06:35 일몰 18:03
월출 08:25 월몰 19:41

장성	8~16	흑산도	14~17
담양	8~17	구례	6~17
화순	8~17	곡성	6~16
영광	9~17	완도	11~18
함평	10~18	강진	9~18
무안	10~17	장흥	8~18
영암	9~17	해남	8~18
진도	10~17	고흥	9~18
신안	10~17	보성	6~17

목포	만조 03:24 15:50 간조 08:32 20:55	여수	만조 10:24 22:31 간조 03:54 16:22
----	----------------------------------	----	----------------------------------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성범죄’ 교원 3년간 33명 성비위 방지대책 마련 절실

광주·전남에서 최근 3년 동안 성범죄로 적발된 교원이 3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성비위 교원 신고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광주는 15명·전남은 18명의 교원이 성비위로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 전국에선 총 326명의 성비위 교원이 적발됐다. 성비위 교원 중 국공립 학교 교원은 202명(67%), 사립학교 교원은 124명으로 집계됐다.

성비위에 따른 징계는 해임 및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 188건, 정직·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128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학생이 174명으로 57%에 달했고, 교원은 65명, 일반인은 63명이다. 가해자는 평균 나이가 28.1명(86%)·교장 24명·교감 16명 순이다.

김 의원은 “일부 교원의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성비위 방지를 위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인격체로 존중받는 교육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영산강 역사축제 준비 끝” 제법 쌀쌀한 가을 날씨를 보인 10일 오후 광주시 서구 극락교 인근 영산강변에 역사가 은빛 물결을 출렁이며 장관을 이루자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영산강 역사축제를 앞두고 서대석 서구청장과 관계자들이 축제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태규 기자

전두환, 관할이전 기각 항고장 제출

법원 “사건기록 송부”...대법 판단까지 재판 연기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7) 측이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신청기각에 불복,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1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최근 재판부의 관할이전 기각결정에 대해 전씨

측이 지난 8일 즉시항고했다.

전씨측 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415조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 한해 대법

원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해당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의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통해 사유 존재 여부를 검토했다.

재판부는 규칙위반 여부는 대법원

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결론 내렸고, 관할이전 사건기록을 대법원에 보내기로 했다.

그 동안 전씨 측은 현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에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송신청)을 피력해 왔다.

하지만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판절차가 진행되자 또다른 소송절차를 토대로 상급법원인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했다. 관할이전 신청과 즉시항고로 전씨의 형사재판은 결국 연기됐다. /이나라 기자

‘고3 시험문제지 유출’ 행정실장·학부모 징역형 구형

고3 내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행정실장과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광주지법 10단독(류종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씨(58)에게 징역 4년, 학부모 B씨(52·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학교보안을 담당하는 행정실장으로서 시험지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지를 유출해 죄가 무겁다. B씨는 사건을 주도하고 범행장소에 대해 거짓 진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20일과 7월 2일 광주 모 고교 3학년 1학기 이과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통째로 빼돌려 교육행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년을 2년여 앞둔 A씨는 올해 4월 학부모 운영위원회 회식자리 등에서 B씨에게 부탁을 받고 학교 등사실에서 시험지를 빼냈다.

B씨는 빼돌린 시험문제를 재정리해 아들에게 기출문제인 것처럼 건네 아들이 미리 풀어보고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으나 A씨가 부모의 마음으로 간곡하게 부탁해 끝내 거절하지 못했다. 정말 어리석었고 피해를 본 학생과 부모님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